데스크시각

김 재 열

지방행정도 선택과 집중이다

농로포장에서 부터 상·하수도 시공, 마을회관 개·보수, 관정굴착 등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표적 숙원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시장·군수 마음 먹기에 따라 착공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시장·군수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은 포괄사업비 덕분이다. 주민숙원사업비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으로 표기되는 포괄사업비는 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상황 등에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칭한다.

'고무줄' 포괄사업비

포괄사업비는 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연간 10~20억원 안팎이다. 선거가 임박해서는 액수가 늘어난다. 전남 A군의 지난해 포괄사업비는 46억원으로 2004년의 19억5천여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포괄사업비는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선거용으로 활용돼 선심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업도 포괄사업비로 포장돼온 것이 상례였다. 과거 일부 시·군에서 포괄사업비는 '눈먼 돈'의 대명사였다.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쌈지 돈 쯤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최근 전완준 화순군수가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포괄사업비 폐지를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달 31일 군의회 정례회에서 "포괄사업비를 모두 없애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정식)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의 이같은 발언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문제는 읍·면별로 비슷한 액수가 지원되는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이다. 화순군이 지난 3년간 포괄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은 115억원에 달한다. 매년 전남 전역에 막대한 포괄사업비가 뿌려지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100건이 넘는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100만원에서 몇천만원대로 예산을 쪼개 집행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선택과 집중은 글로벌 경영시대의 필수 생존전략이다. 지자체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한정된 지방재정을 경쟁력 있고 효율성 높은 시책이나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만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시각과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 지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 세일즈에 앞장서기에도 바쁜 시장·군수가 농로 포장이나 마을회관 보수까지 챙기는 것은 표를 얻는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지역의 미래 청사진 구축과는 무관하다.

투자유치에 주력해야

고흥군이 민선 4기 출범이후 지난 4개월간 군수의 공식 행사를 집계한 결과, 박병종 군수가 하루 평균 2~3건씩의 지역행사에 참석했으며 면담한 민원인만 500여명에 달했다. 민원인을 면담하고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일과가 빠듯하다. 고흥군이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군수가 참석할 각종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군수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웬만한 숙원사업은 읍·면장들이 지역주민과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 읍·면장 권한을 강화하고 단체장들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주력하는 등 지역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소소한 마을 민원 해결에 매달려서 임기 4년을 보내서야 되겠는가.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사 설

정부, 부동산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청와대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경질키로 했다. 추 장관 등은 내각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다.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이지만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인사인 셈이다.

청와대는 여론에 밀려 이들을 경질키로 했지만 '민란 직전의 상황'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의 감이 든다. 정치권이 여야 구분없이 환영한 것만 보아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야당에선 내각 총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다.

최근 수도권을 휩쓴 '부동산 광풍'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투기로 일확천금한 일부 계층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근로의욕을 잃을 만큼 깊은 상처를 받았다. 특히 광주와 전남을 비롯 비수도권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리는 2류 국민이냐'는 자조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세금폭탄'으로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는 반시장적 정책이었고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었다. 잇단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서 드러나듯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하며 지방을 더욱 위축시켰다.

정부는 발상부터 바꿔 부동산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부동산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새 부동산정책팀은 '코드'와 '오기'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꾸려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활성화 방안은 현재 포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문제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 불균형 키운 R&D 투자 수도권 집중

국가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산자부의 '지역 R&D 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부의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비 1천50억원 가운데 70%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행됐다. 반면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4.8%와 1.8%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가 전체 R&D 예산 가운데 73.8%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됐다.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실에서 과연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한 것인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국가 R&D 투자의 수도권 편중은 고급인력과 우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게 된다. 정부가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R&D 투자의 불균형은 공모제인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고급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이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다. 차제에 R&D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모제에서 지역별 총액 할당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R&D 투자는 지역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기업은 R&D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기업 없는 지역발전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선행돼야 지역균형발전도 가능하다.

국가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대란에서 보듯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정부는 지방육성 없이는 국토균형발전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D 투자는 물론 모든 투자정책을 지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 옥 주

장애인 취업, 기업의 맞춤훈련으로

지금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상황은 경기가 활성화되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늪 속에 빠져있다.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 답답하고 우울한 우리네 현실이다.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걱정은 이런 때 일수록 소외되기 쉽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취업 문제이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한 지도 15년이 흘렀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등록자 수 가 200만 명대를 넘고 있고, 장애인 발생은 각종 질환 및 사고등 89%가 후천적 요인으로 기인 한다고 한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항상 위험한 불안요인 속에 살고 있다.

기업의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나 기업들의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많이 미흡하다. 다행히도 정부부문에서는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2004년 연말을 기해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율 2%(2005년 2.25%)를 넘어섰다. 이에 힘입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에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공단 산하 권역별 센터에서는 금년 초 부터 기계, 정보기술, 전자, 디자인 등 각 분야에 걸쳐 기업에서 필요한 각 직무를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기업 주문형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를 가지고 채용을 전제로 한 훈련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수료자는 곧 바로 취업이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실시결과는 매우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요즈음, 불편한 장애를 극복하면서 오직 취업목표의 일념으로 밤잠도 설치고 주말도 반납 한 채 빡빡한 훈련과정을 마친 후에는 당당히 대기업에 취직이 되어 환한 얼굴로 출근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다소 불편할 뿐이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 곳곳의 적재적소에 업무가 주어지면 장애라는 다양성이 오히려 직업적인 측면에서 깊은 애착과 집념으로 비장애인보다 고용안정률이 높게 나타난다.

기업도 이젠 장애인을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보다도 고용시장의 산업인력으로 직업적 동반자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장애유형별 직무를 발굴하여 일정한 훈련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가 곧 복지' 라고 한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일을 통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원장
·2006년 8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 고

김 세 곤

남도의 한(恨)을 팝시다.

영화 '서편제'를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이청준의 원작 소설을 임권택이 감독을 맡고, 현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과 오정해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를. 소리꾼 아비가 딸에게 청강수를 넣어서 눈을 멀게 하고 그 딸은 판소리를 부르면서 한(恨)을 삭히는 장면을.

요즘 남도의 한에 대하여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순조 시절 흑산도에서 16년간을 귀양살이 한 손암 정약전. '현산어보'의 저자요, 다산 정약용의 형인 그는 고향만 바라보면서 갇혀 지내다가 절해고도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장흥군 안양면 해산토굴에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한승원 선생은 그의 소설 '흑산도 하늘 길'에서 정약전의 죽음을 ' 파랑새가 날아갔노라'고 표현했더군요.

일제치하의 한. 1935년에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 이 노래는 목포만의 눈물이 아니라 한민족 모두가 나라를 잃은 설움으로 흘린 눈물이었고, 그 당시 우리네 조상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많은 이내 신세를 달래고 달랬으리라 짐작됩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빚어진 남북 분단의 한.그리고 1948년 목포에서 만들어진 '부용산' 노래.

벌교 부용산에서 천사 같은 여동생을 묻고, 목포여고 다니는 사랑하는 제자를 저 세상에 보낸 슬픔을 노래한 박기동 시인이 지은 이 노래. 그런데 이 만가(輓歌)가 빨치산의 애창곡이 되고, 민주화 운동가의 노래가 되어 '오적'시의 김지하 시인도 작은 이모에게서 배운 이 노래를 잘 불렀다 합니다.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한. 한 순간에 자식을, 아내를, 형과 동생을, 친구를 잃은 아픔을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달래고. 82년 5·18묘역에서 거행된 윤상원, 박기순 부부의 영혼 결혼식에서 부른 이 노래.

한(恨), 죽음, 눈물. 이러한 검정색, 회색의 삶이 남도사람들의 한이요, 사는 것이 한을 쌓는 것이고 한을 쌓는 것이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한을 안고 살아온 남도사람들의 한풀이는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글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임방울의 '앞산도 첩첩하고' 단가도 나오고, 춘향이의 '쑥대머리' 판소리도 나오며, 이청준의 '서편제', 조정래의 '태백산맥' 글도 나오는 것 아닐까요

요즘 문화수도 광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광산동의 전남도청 자리를 아시아문화중심센터로 만든다는 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중심센터 한 곳에 '남도 한(恨) 노래'방을 하나 만들어서 실컷 울게 합시다. 실컷 눈물을 흘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도의 한'도 팝시다. 좋은 상품이니까요.

정념(正念), 정심(正心), 정화(淨化)의 정신건강 치료제, 남도의 한을.

〈노동부 법무행정팀장〉

無 等 鼓

다이아몬드 '비극'

요즘 대만은 천수이볜 총통 가족의 132만대만달러(약 3천8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로 시끄럽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천 총통 부인이 지난해 국가기금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천 총통은 이를 부인했다가 선물용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등 수차례 번복하며 문제를 더욱 키웠다. 급기야 야당이 다이아 반지 찾기 운동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총통의 퇴진 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와 사랑의 상징인 다이아몬드에는 놀랍게도 20세기 가장 끔찍한 '피의 역사'도 깃들어 있다. 지난 2001년 영국의 국제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가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아프리카 내전 실상을 폭로했을 때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참상의 중심에 세계 최고 다이아몬드 광맥을 가진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 있었다.

1866년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영국, 프랑스 등 점령국들은 곳곳에 광산을 설립했다. 시에라리온 사람들도 채굴에 뛰어들었다.

1991년 반군혁명연합전선(RUF)이 등장, 광산지역을 점령하고 다이아몬드를 팔아 무기를 사들였다. 7천여명의 소년들을 납치해 마약과 무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을 무차별 살육케 했다. 2002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개입하기까지 무려 37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비극이 알려지면서 '다이아몬드=영원한 사랑'이라는 신화를 퍼뜨린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 특히 전세계 시장의 85%를 점유했던 드비어스는 저가에 다이아를 사기 위해 이를 방조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클린다이아몬드 운동'. 이들은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모든 다이아몬드에 '미분쟁원산지증명'을 부착하는 킴벌리 회합도 성사시켰다.

그러나 요즘도 뒷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이아몬드에 부여한 인류의 헛된 환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다이아몬드의 비극은 영원히 계속될 지도 모른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일부 서점서 차별 대우… 누가 도서 상품권 사용 하겠는가

얼마전 중학생 아들이 잡지에 보낸 기고문이 채택돼 도서 상품권을 받아 평소 다니던 서점을 찾았다.

그 서점은 책을 살 경우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적립해주는 곳이라 이용했는데, 기분이 상해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현금이 아니라 도서상품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포인트라고 해도 현금으로 환산하면 기껏 몇백원이다.

하지만 포인트 적립을 위해 그 서점을 찾은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이용했다는 것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서점 주인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점 주인은 "도서상품권은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현금과 도서상품권을 차별대우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해 줄 말이 없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도서상품권을 사서 쓰겠는가.

▲임중선·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 난폭운전 철저히 단속해야

3일전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중에 퀵 서비스 오토바이 두 대가 내 차와 옆차 사이를 지나갔다.

무심코 넘겼는데 순간 '딱'소리가 나 봤더니 오토바이가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깨버렸다.

이미 저만치 가고 있는데다, 번호판을 볼 수도 없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앉아서 사이드 미러 수리비만 날렸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우 빨리 물건을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에 차선을 무시해 달리는가 하면 급 차선 변경, 정지선과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가 깜짝 놀라는 일도 많다.

경찰은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